전남매일

www.jndn.com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제8915호 (음력 6월 16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 경비·청소 용역 |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 전기안전관리 대행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열린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에서 북구청 관계자,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 등이 취약계층을 위한 초복 맞이 삼계탕을 포장 용기에 담고 있다. /김생훈 기자

"코로나19 4차 접종 50대까지"

정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강기정 시장, 확산방지 특별지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곳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철저한 생활방역을 강조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강 시장은 "통제를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위험군 관리와 위중증으로의 진행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차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감염 취약계층 선제적인 의료 대응과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빠른 검사와 치료를 위한 원스톱 의료기관 확충 ▲방역인력과 시설 강화 ▲구급대, 응급실, 입원 병동, 시·구보건소 핫라인 상시 가동 ▲전문인력 양성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서울=강병운·길용현 기자

전남도 '3부지사 시대' 열리나

동부권 통합청사 내년 개청 임박
본부장, 지방정무직 1급 승격 추진
행안부 승인 관건…경남 사례 활용
이달 인사 2급 공석, 장기포석 관측

전남도의 제2청사 격인 동부권 통합청사가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청사 개청과 맞물려 전남에 '3부지사 시대'가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8년 9월 동부권에 흩어진 도 산하기관을 아울러 동부권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청사 건립을 지시했다.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이후 줄곧 제기돼온 동부권 홀대론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남의 화합과 새로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내년 5월 개청 예정인 동부권 통합청사는 사업비 387억원을 들여 3만 24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31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810대의 주차장, 스마트민원실, 북카페, 열린회의실, 도심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청이 임박하면서 관심은 통합청사 이전 규모와 인사 체계에 쏠린다.

전남도는 통합청사 개청 시기에 맞춰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존 동부지역본부 내 환경산림국 1국에서 3개 실·국을 추가 이전해 '4개 실·국' 체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통합청사가 제2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재 국장급(3급)인 동부지역본부장 직급의 지방정무직 부지사(1급) 또는 2급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역시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이 같은 안을 공약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 이뤄진 실·국장 인사에서 2급을 공석으로 둔 것도 장기적으로 내년 통합청사 개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건은 행정안전부의 협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간부급(4급) 이상 직책의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해 광역시·도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을 정해져 있어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현재 행안부 입장은 미온적이다. 광역자치단체의 '3부지사 체제'가 이례적인 데다 부지사가 한 명 늘어나는 것에 따른 파급효과도 매우 큰 탓에 선뜻 승인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타 지자체들이 문제 삼을 경우 형평성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형편.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조직도나 인원 배치, 기능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기구 정원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경남도가 꼽힌다. 경남은 동부권인 창원에 치우친 도청 기능을 대신해 서부권인 진주에 서부지역본부가 3국 13과 체제로 운영되며 제2청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서부지역본부장도 실장급(2급)으로 임명된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지사직을 수행했던 민선 6기 당시 기존 정무부지사를 폐지하고 서부부지사를 신설해 서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하며 업무 총괄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현재도 경남지역 정치권에서 서부부지사 신설 등 3부지사 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난해부터 행안부에 동·서부 균형발전과 행정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동부지역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통합청사 개청 전까지 경남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동부권 소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근거로 논리를 보강해 행안부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1급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2급 상향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청사가 동부권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일선에서 뛸 부지사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 2급 상향은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부지사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국 추가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 시점에 대해 전남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검토하기에 너무 이르다. 벌써 어느 조직이 옮긴다는 소리가 들리면 실·국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 지어질 통합청사에 몇 개 국이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선우 기자

한은, 뛰는 물가에 사상 첫 '빅스텝'

기준금리 통상 두배 0.50%p 인상
1.75→2.25%…3회 연속도 처음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관련기사 19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10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모두 1.7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다.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매우 강한 점도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 /연합뉴스

INSIDE NEWS

김영록 지사-전남 국회의원 건의문 ▶3면
형식에 그친 몰카단속 ▶7면
기획/강종만 영광군수 ▶11면